

문 9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㉠~㉣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(1)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(㉠)이/가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(㉡)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.
- (2) (1)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(㉢)이/가 (㉣)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㉠	㉡	㉢	㉣
① 행정안전부장관	국무총리	국무총리	대통령
② 국무총리	대통령	시·도지사	행정안전부장관
③ 행정안전부장관	국무총리	시·도지사	행정안전부장관
④ 국무총리	대통령	행정안전부장관	국무총리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.

문 11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며, 대체역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민방위대 조직에 포함된다.
- ㄴ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는 읍·면·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.
- ㄷ. 여성은 지원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며,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·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ㄹ.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① ㄱ, ㄷ

② ㄴ, ㄷ

③ ㄴ, ㄹ

④ ㄱ, ㄴ, ㄹ

문 12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.
- ㄴ.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예비군법」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.
- ㄷ.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하나,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지휘권을 행사한다.
- ㄹ.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·면·동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.

① ㄱ, ㄷ

② ㄱ, ㄹ

③ ㄴ, ㄷ

④ ㄷ, ㄹ

문 13. 민방위기본법령상 ㉠~㉤에 들어갈 것을 빠른 날짜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확정된 집행계획을 통보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(㉠)까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▲▲월 ▲▲일부터 (㉡)까지 읍·면·동민방위협의회 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·도계획을 매년 (㉢)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-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■■■월 ■■■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(㉣)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① ㉠ → ㉡ → ㉢ → ㉣ ② ㉠ → ㉢ → ㉡ → ㉣
 ③ ㉣ → ㉠ → ㉡ → ㉢ ④ ㉣ → ㉠ → ㉢ → ㉡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.
-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·면장·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,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(驛舍),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은 경보전과 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.
- ④ 지방환경청장은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X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,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ㄴ.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- ㄷ.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·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읍·면·동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- ㄹ.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,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.
- ㅁ.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,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	ㄱ	ㄴ	ㄷ	ㄹ	ㅁ
①	○	X	○	X	○
②	X	○	X	○	X
③	○	X	X	○	X
④	X	○	○	X	○

문 16.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다만, 건축물·차량·선박·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)

	구분	종류	경계관제	공습관제
ㄱ	특수시설 옥내등	병원의 중환자실	차광	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
ㄴ	일반교통 관제등화	보행자 신호등	평상시와 같음	소등
ㄷ	철도관계 등화	대기실	소등. 다만,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	소등
ㄹ	일반 옥외등	소방관서 표지등	소등	소등

- ① $\neg, \perp$
② $\sqsubset, \sqsupset$
③ $\neg, \perp, \sqsubset$
④ $\neg, \sqsubset, \sqsupset$

문 17. 민방위기본법령상 법정형이 ‘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르면?

- ①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
- ③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한 민방위 대장
- ④ 전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

문 18.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공부 모임 친구들의 민방위 동원 관련 보상금에 대한 대화이다. 민방위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?

A: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사망하면 사망 보상금은 얼마지?

甲: 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·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고, 월평균임금총액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에 것을 기준으로 해.

A: 만약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고 장애 등급이 4급이라면 장애 보상금을 얼마 받게 되자?

乙: 장애 등급 4급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7/12이야.

A: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이지?

丙: 통계청이 매년 조사·공표하는 도시간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야. 다만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.

A: 읍·면·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재해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지?

丁: 재해 보상금은 시·군·구가 부담해.

- ① 甲, 乙 ② 甲, 丁 ③ 乙, 丙 ④ 丙, 丁

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19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자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ㄱ. 국회의원

ㄴ.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

ㄷ. 군수

ㄹ. 교도관

ㅁ. 지방의회의원

ㅂ. 지방공무원인 특별시의 부시장

- ① ㄱ, ㅁ ② ㄷ, ㅂ ③ ㄱ, ㄴ, ㄹ ④ ㄴ, ㄷ, ㅂ